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03.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3. .
행정·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3월 3일 / 강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7. 3. 20.)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증원 : 13명

| 구 분 | 정원의 총수 | 집행기관 정원 | 구의회 사무국 정원 |
|------|--------------|--------------|------------|
| 현 행 | 1,523 | 1,495 | 28 |
| 변경 후 | <u>1,536</u> | <u>1,508</u> | 28 |
| 증 감 | +13 | +13 | -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3】)

○ 정원 총계 : 1,523명 ⇨ 1,536명 (+13명)

○ 일반직 계 : 1,518명 ⇨ 1,531명 (+13명)

－ 6급 이하 : 1,445명 ⇨ 1,458명 (+1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2. 15. ~ 2017. 3. 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제외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강희순)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충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 복지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 증원 인원은 13명으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10명(복지직 8명, 복지담당 행정직 2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시행에 따른 3명(복지직)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안의 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준액 대비 예산편성 현황**(기준일: 2016. 11. 18.)

(단위 : 천원)

| 구분 | 기 준 액 (행정자치부) | 기준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 | | 기준액 대비 % | 비 고 |
|-------|------------------|---------------|-------------|-----------|-------------|--------|
| | | 총 예산액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
| 2017년 | 126,686,663 | 124,767,424 | 122,069,069 | 2,698,355 | 98.4% | |
| 2016년 | 123,207,091 | 111,174,546 | 108,431,012 | 2,743,534 | 90.2% | |
| | | 113,367,282 | 110,623,378 | 2,743,904 | 92.0% | |

○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사회복지 인력의 증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전환, 주민 복지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5., 2014.11.19.>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